

전북특별법 시행 1년

특례 실행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도, 1년간 추진 성과 점검
현재 61개 과제 시행 중
14개 사업도 시행 준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효된 전북특별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방분권 확대를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22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성과 보고회를 열고,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을 시행 1주년을 맞아 특례 실행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도민 체감 성과와 확산에 특별자치도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법에는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지역 강점을 살린 5대 분야 특례가 131개 조문에 담겨 있으며, 도는 이를 7개 사업과 과제로 구체화해 추진해 왔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적극 활용한 결과, 현재 61개 과제가 시행 중이며 나머지 14개 사업도 조례 제정, 관계 부처 협의, 공모 대응 등 절차를 거쳐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5대 분야 핵심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반 구축

도는 5대 분야 핵심산업 특례를 중심으로 전북이 국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인프라 확충과 기반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농생명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각각 농생명산업지구 6개소와 예비지구 2개소, 해양문화유산지구 등 관련 지구 지정에 완료했다. 통상 산업 육성을 위한 지구·단지 지정에 수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례를 통해 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전북을 피지컬 AI 분야 혁신 거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축하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전북을 선도적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1년 만에 산업 거점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식품·바이오, 야간관광·MICE 등 연계 사업을 확대해 산업 구조의 확장과 고도화를 추진했다.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는 복합단지 57개년 진흥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며 단지 조성의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했다. 특히 2026년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타당성 연구용역비(국비 3억 원)를 확보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탄소, 바이오, 이차전지, 무인이동체 등 미래첨단산업 전환을 위해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무인이동체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며 연구·실증 인프라를 확충했다. 메이오 클리닉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섰다.

▲민생 전반에서 가시화되는 도민

체감 성과 일지리아 보건, 안전 등 민생 현장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고용특구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구직자 600명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196명을 취업으로 연계했다. 외국인 기술창업 비자 도입과 해외 스타트업 지역 채용 확대 등 기업 유치와 고용 여건 개선도 병행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C형간염 항체검사 1만 명 지원, 역학조사관 확충, 감염병 협의체 구축, 화재안전물품 1만 2,100여 개 지원 등 보건·안전 분야에서도 생활 안전망을 강화했다. 특히 화재안전물품 지원은 특례 취지를 적극 반영한 사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과 물품 범위를 확대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마을어장과 중·하 시험어업을 추진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합법적인 조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오랜 과제를 해결

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례 연계사업 확대 및 2차 특례 실행준비

특례는 제도적 기반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며 성장 효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도는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첨단 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등 총 85건, 3조 2,421억 원 규모의 특례 연계 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연계사업이 특례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인 만큼, 국가예산 확보와 신규·확장 사업 발굴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2026년에는 특례 목표를 보다 세분화하고 도민 체감 지표를 정밀해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점 산업 육성과 인구 감소 대응 등을 담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례 실행 방향과 로드맵을 신속히 수립하고 합법적인 조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오랜 과제를 해결

하는 성과도 거뒀다.

▲민생 전반에서 가시화되는 도민

체감 성과 일지리아 보건, 안전 등 민생 현장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고용특구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구직자 600명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196명을 취업으로 연계했다.

외국인 기술창업 비자 도입과 해외 스타트업 지역 채용 확대 등 기업 유치와 고용 여건 개선도 병행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C형간염 항체검사 1만 명 지원, 역학조사관 확충, 감염병 협의체 구축, 화재안전물품 1만 2,100여 개 지원 등 보건·안전 분야에서도 생활 안전망을 강화했다.

특히 화재안전물품 지원은 특례 취지를 적극 반영한 사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과 물품 범위를 확대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마을어장과 중·하 시험어업을 추진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합법적인 조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오랜 과제를 해결

하는 성과도 거뒀다.

▲민생 전반에서 가시화되는 도민

전북 시민사회 “송전탑 대신 기업 유치하자”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추진위, 삼성 반도체 새만금 유치 촉구 서명운동 공식화

전북 시민사회가 “희망 고문을 끝내고 전북의 대도약을 시작하자”며 삼성 반도체 새만금 유치와 SK 데이터센터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유치추진위원회(상임대표 채정봉)는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반도체 새만금 유치와 중단된 SK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군산발전포럼(두준태), 새만금환경생존연합(한상오), 리더스포럼(채정봉), 탄소중립전북행동(김용현), (사)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송승룡), RE100전북기업협의회(김상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이정진) 등 도내 7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전북 산업 미래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를 모았다.

채정봉 상임대표의 모두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두준태 추진위원장은 “전북은 더 이상 수도권에 밝히기 위한 희생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송전탑이 아니라 기업을 원하는 것이 전북도민의 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전북 곳곳에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송전탑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북의 산과 들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탑으로 갈라지고,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며 “우리가 생산한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정작 전북은 쓰지 못하고,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유치추진위원회는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반도체 새만금 유치와 중단된 SK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공식 선언했다.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에너지 자산지소(地產地售)’ 원칙을 언급하며, 전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에너지는 생산된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방식”이라며 “전북에서 만든 전기는 전북 산업과 도민의 삶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0년 넘게 이어진 새만금 개발 지연을 ‘희망 고문’에 비유하며, 이제는 실질적인 산업 유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새만금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지만, 이를 소비할 대규모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불합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새만금은 또다시 기회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명분 없는 장거리 송전탑 건설 중단과 에너지 자산지소 실현 △전력난에 직면한 용인 삼

성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중단된 SK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의 즉각적인 재개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전력 공급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용인 대신, 재생에너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새만금이야말로 최적지”라며 “전기가 없는 곳으로 공장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있는 곳으로 공장이 오는 것이 상식이자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SK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기업과 도민이 약속을 받고 기다려온 사업이 인프라 문제와 행정력 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전북도와 정치권, 기업이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적인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번 범도민 서명운동이 단순한 캠페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도내 전역에서 서명운동과 공론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이상윤 의원,尹 부부 2차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윤 의원(전주)은 22일,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상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의혹 수사에 초점을 둔다. 윤석열 12·3 내란 혐의 사건과 무장헬기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의혹, 노상원 수첩, 계엄 후속 조치를 한 국가기관과 김건희 수사능다 의혹, 임성진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임명될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5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과 함께 최장 17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아울러 3대 특검과 수사대상이 겹칠 경우를 대비해, 특검들 간의 상호 협력의무도 명시했다. 또한 기존 진행 중인 재판들은 3대 특검에게 우선권을 주되, 특검 간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행상의 효율 및 신속 재판을 보장했다.

한편 이상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검찰·법원 개혁 입법 완수 △확실한 내란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대타 의혹 수사 촉구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정읍·고창 국가예산, 정부 평균 웃돌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2일 2026년도 국가예산에서 정읍시와 고창군이 정부 전체 예산 비중을 상회하는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6,383억 원, 고창군은 12.9% 늘어난 4,341억 원으로, 정부 예산 비중을 8.1%를 웃돌았다. 이는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속원사업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주요 성과로는 정읍의 우주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구축 등 미래 첨단기술 관련 신규 사업과, 고창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청년회화주택 사업 등이 반영됐다. 특히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실시계획비가 증액되며 본격 추진이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 “내년 지방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 경제시장 될 것”

나인원 도의원, 김제시장 출마 공식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원 의원이 22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김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민선 차치 30년 동안 김제시는 인구가 약 5만 명 가까이 줄어들며 사실상 소도시 하나가 사라졌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김제의 운명을 바꾸는 대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제 시민들이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김제가 발전했는지, 삶이 나아졌는지”라며 “문제의 핵심은 경제이고, 이제는 허울뿐인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경제시장’으로 규정하며 김제 대전환을 이끌



겠다고 출마의 뜻을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도시 전환, 지역경제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경제기업 도시 조성, 전국 최초 청소년 아원식사 지원, 대기업 유치를 통한 X-농업에 터센터 구축 등 김제의 미래를 바꿀 5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

“31년 행정 경험으로 인구소멸위기 극복”

김양원 전 도의회 사무처장, 부안군수 출마 선언



전주시 부시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을 지낸 김양원 전 공무원이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지방선거 부안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사무처장은 31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부안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군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햇빛연금·바람연금’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민과 어민,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김 전 사무처장은 “중앙부처와 전북도 인맥을 활용해 부안 일 필요인 사업, 군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이 지연되고 있는 농공단지에는 규제 완화와 맞춤형 기업 유치를 일지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어 부안의 대표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제값을 받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해 어민 소득을 높이고, 여기에 체험관광시설과 명품 마실길 조성을 통해 관광객이 머무르고 소비하는 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처장은 청년과 귀농·귀촌 정책,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 “따뜻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을 약속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부안,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존중받는 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만호 기자

“문화로 경제 살리고 사람으로 미래 밝힐 것”

안수용 둘레 이사장, 정읍시장 출마 공식화

(사)둘레 안수용 이사장이 2026년 지방선거에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이사장은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레저·힐링 문화권,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담은 역사·민중 문화권, 정읍시를 기반으로 한 문화·공연 문화권, 태산산비 문화권을 잇는 인문문화권 등 4대 문화권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사람이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 구조를 만드는 한편 신장동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해 ‘대한민국 지역문화산업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문화산업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안 이사장은 “문화 행복 청년이파트 조성하고 주거·일자리·문화가 결합된 청년 정착 정책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정읍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권 중심 돌봄과 공동체 회복 정책을 통해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정읍·고창 국가예산, 정부 평균 웃돌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2일 2026년도 국가예산에서 정읍시와 고창군이 정부 전체 예산 비중을 상회하는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6,383억 원, 고창군은 12.9% 늘어난 4,341억 원으로, 정부 예산 비중을 8.1%를 웃돌았다. 이는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속원사업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주요 성과로는 정읍의 우주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구축 등 미래 첨단기술 관련 신규 사업과, 고창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청년회화주택 사업 등이 반영됐다. 특히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실시계획비가 증액되며 본격 추진이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